

/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 강원도 변화 /

춘천~속초철도 조기 착공 청신호 켜다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에서 도내 유효투표의 61.97%(문재인 후보 37.53%)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철도 공약 합격점=박근혜 대통령의 '8대 강원도 공약' 중 1번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추진이었다. 이 공약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뼈격거렸지만 최근 청신호가 켜졌다.

청신호에는 '필요한 SOC는 미래 가치를 봐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주~원주 철도 역시 이 같은 시각으로 볼 때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원주~강릉 철도는 2017년 개통을 위해 순항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철도 사업 과제는 동해북부선철도, 경원선 철도 남측 구간, 금강산선 철원~유곡 간 연결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

SOC 공약 합격점

원주~강릉철도 2017년 개통 순항
동해북부선 단절구간 연결 전망
오색케이블카 설치 기대감 높아

는 8월까지 확정될 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이들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통일대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에 따라 강원 동해안권을 통한 북방경제 진출 기대감과 필요성도 높아졌다.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지도 긍정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춘천 레고랜드를 '관광개발 분야의 외자유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무산됐던 오색 케이블카에도 최근 청신호가 켜졌다.

올림픽 지원 부족

문화부 소극적 지원·엇박자
대회지원위 추진 동력 떨어져
수도권 규제완화 따른 우려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혼선=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한 전폭적 지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부처에 지시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의 뼈격 소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실무선에서 변질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정부의 소극적 지원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까지 만들어 냈다.

이완구 총리 임명 이전까지 총리 후보가 잇따라 낙마하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의 동력이 저하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잇단 인사 잡음과 재난 발생, 정윤희 문건 유출사건 등이 국가발전 전략 추진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박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인 살기 좋은 집경지역 만들기, 설악권 일대 복합관광중심지로 육성 등도 현재로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시화될지 불투명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심화 우려도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노승만 선임연구위원은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전략은 집중과 선택을 지향해야 하지만 국토 개발은 수도권과 서남해안권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강원 동해안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레고랜드 상반기 착공·캠핑페이지 부지매입 189억 배정

올해 춘천 부동산 반등 호재

지난해 침체를 겪었던 춘천지역 부동산시장이 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캠핑페이지 개발 등도 추진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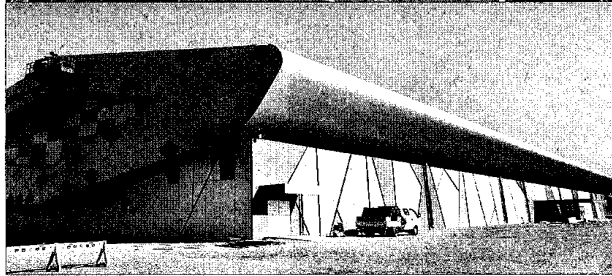
■레고랜드 착공 가시화=춘천 중도의 레고랜드가 상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최근 레고랜드 건설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화재 발굴조사가 재개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부분준공을 받아 5~6월 1단계 사업인 테마파

테마파크 진입교량 4~5월께 착공
근화동~서면 계획도로 83억 배정

크 사업이 착공될 계획이다. 테마파크 사업은 5,011억원이 투입돼 중도 일원 129만1,000㎡ 부지에 조성된다. 호말과 콘도 스퀘어 아웃렛 등은 2018년 개장될 예정이다. 도가 발주하는 진입교량 공사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4~5월께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캠핑페이지 개발사업도 올해 국비가 15억원 추가 확보돼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핑페이지 부지매입에 189억원, 캠핑페이지~서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3억원 등이 배정된다. 옛 캠핑페이지 시민공원화사업은 2019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사업예정지의 유적지 전경(사진 위)과 캠핑페이지 내에 옛 미군기지 터에 있던 격납고를 리모델링해 건립한 체육관 전경.

■춘천지역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이처럼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해 하락했던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토지의 경우 레고랜드와 캠핑페이지가 들어서는 삼천동 및 근화동은 물론 춘천 전 지역에서 수

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은 떨어졌지만 땅값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단지 토지매매 문의만 많았을 뿐 수요자들이 망설이면서 실제 매매거래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 번 형성된 지가는 쉽게 떨어

어지지 않아 올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땅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역 집값은 지난해 3.02%나 떨어졌었다. 도 평균이 0.15%, 강릉의 경우 3.57%나 상승했지만 춘천은 침체가 이어졌다.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하락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부동산 매매시장에서의 침체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삼천동과 근화동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지만 인근 은의동, 퇴계동 등에 밀집된 아파트단지에는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

전 지역에서 토지 매매수요 급등 전망
연말 롯데캐슬 입주 시작 거대 활발

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말 도내 최고가·최고층 아파트인 은의동 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입주가 시작되면 매매·전세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춘천은 2009년 이후 고속도로·전철 개통으로 2~3년간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4,000만~5,000만원씩 상승하는 등 호황이 이어졌지만 이후 다소 부침을 겪었다"며 "올해는 땅값 상승을 유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 집값 상승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침체된 신규 분양시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위호기자 faw4939@kwnews.co.kr

【 2015.02.23(월) 강원일보 】

조달청 7,253억 규모 공사 연내 발주

강릉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주목

올해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시설공사 금액이 최소 7,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자체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신규공사 및 장기계속공사는 총 1,364건 7,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릉에 건립되는 올림픽아트센터의 공사금액은 360억원으로 지자체 신규 발주 중 전국 8위 규모로 나왔다.

국가기관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11조 7,7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양수산부(3조6,777억원), 교육부(9,089억원), 법무부(8,985억원) 등

순이다. 이들 조직의 도내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올해 시설공사 발주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2015.02.23(월) 강원도민일보 】

SOC·관광 '진전' 지역균형 '기대밖'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올림픽 지원 고속철 등 도내 주요 현안 해결점

수도권 규제완화 노골적 비수도권 자치단체 반발

▶ 관련기사 3면

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겨울올림픽 지역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 △여주~원주간, 원주~강릉 복선전철 추진 △침탄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설안전 일대 복합관광지대 육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SOC를 비롯한 주요 현안은 해결점을 찾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국비 6조71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5조525억원보다 1조190억원이 증가된 액수다. 특히 SOC 분야는 전체 절반규모인 3조1245억원을 차지했다. 총사업비 1539억원 규모의 겨울올림픽 지원 고속화철도(용산~정랑리~망우~원주) 사업과 국도 5호선(홍천~춘천)과 국도 31호선(영월~방림 3구간) 건설사업 등 지역현안 SOC사업 상당수가 신규 반영됐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도 정상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레고랜드 코리아'가 포함된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올해 레고랜드 코리아 진입로량 건설사업 예산은 당

초 정부안 149억원에서 50억원이 증액된 199억원으로 확정됐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설악관 개발사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삭도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으며 후속 조치로 9월 중앙부처 TF팀이 구성되는 등 설악산 오색삭도 조성사업에 전진호가 켜졌다.

반면 지역균형정책 등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국정기조를 이어가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철도 사업 조기 착공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해당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춘천~속초철도는 5월, 여주~원주철도는 3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은 박 대통령이 수차례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설은란에 이어 사후활용방안 등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에 대한 정부 역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올림픽은 대통령이 적절한 때에 입장을 표명한 만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도권규제 완화 역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착실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경제 살려라" 하소연... 설 인사도 무안

국회의원이 전한 설 민심

연말정산 파동 정부 비판

SOC 지역업체 참여 어려워

올림픽 준비에도 깊은 관심

설 연휴동안 지역구 바닷민심을 집중적으로 훑어본 도국회의원들은 22일 한목소리로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는 하소연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진태(춘천) 의원은 "경기가 바닥이니 먹고 살게 좀 해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며 "레고랜드 사업이 이제는 문제 없이 추진되는 거냐, (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지역현안과 관련한 주된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선(원주 갑) 의원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지역민들의 한

결같은 바람이었다"며 "이완구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본회의 표결에 함께 참여해) 보기 좋게 잘 했다. 이 총리가 일은 제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고 소개했다.

이강후(원주 을) 의원은 "경제 좀 살려달라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특히 전통시장 내 식료품점과 제수용품점을 제외하고 옷가게와 같은 곳은 사람이 너무 없어 인사조차 건네기 췌소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권성동(강릉) 의원은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우려끝 끝에 이완구 총리를 인준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부결됐더라면 정치적으로 혼란이 왔을 텐데, 인준해서 정국을 안정시킨 것은 잘한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대형 SOC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온 것이 잘한 일인긴 한데 지역업체들의 참여는 여전히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었다"며 "아울러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정부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문헌(속초-고성-양양) 의원은 "농민은 농민대로 FTA 때문에, 어민은 어민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지역상권은 관광객 때문에 근심 걱정이 참 많았다"고 민심을 전했다.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개각에 대해서도 늦게나마 (청와대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인 것 같아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역현안인 폐광지 도시회생과 평창 올림픽 준비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은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했다.

당정간 소통 활성화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정치권은 전했다.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은 "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잘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선거구의 경우 홍천-횡성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묶어서 잘 획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건설협대회장선거 과열 우려

차기 후보 2~3명

일부 선거운동 나서

편가르기에 회원 분열

강원도내 건설업계 수장을 뽑는 건설협회 도회장 선거가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가운데 입후보 등록 전부터 편가르기와 반목현상이 빚어지는 등 과열되고 있다.

22일 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정동기 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다음달 25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도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입후보자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대표 회원 108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로 강릉과 삼척, 홍천에서 2~3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입후보 등록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일부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영서와 영동,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간의 대결구도로 물아가는 등 과열되고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의 회장 추대 방식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경쟁 구도로 짜여지면서 일부 회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세 확산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하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휴대문 문자를 발송하는 등 회원 간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 차기 회장 선출된 이후에도 현 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아있어 레임덕 현상에 따른 입무공백 등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회원들은 도내 경제발전은 최우선으로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회장 단일화' 형태의 추대방안을 모색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춘천지역 한 건설사 대표는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협회에서 경쟁방식으로 차기 회장을 뽑을 경우 회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직 입후보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협회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회장 선거가 과열돼 내부 분열과 갈등이 빚어지면 지역 건설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후보자들간에 단일화하거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rado.net

건설경기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 100조원대 회복

주택매매 거래량 MB정부 초기 2년보다 9만건 이상 늘어

박근혜 정부 2년간 건설·부동산 경기는 미약하지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의 기초가 되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감축 기초가 여전한 데다, 짙짙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저 후속 입법 지연으로 시장에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 여파로 대규모 SOC 투자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뒀다. 출범 첫 해인 2013년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134조8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까지 SOC 예산을 11조6000억 원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대형 SOC 공약이 없는 데다, 예산 감축에 따른 저항이 적은 SOC가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됐다.

하지만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국내 경기는 투자 대비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 분야의 지출확대를 필요로 했다. 실제로 2년간 SOC 예산을 보면 지난해는 전년보다 2.5% 감소한 24조8000억원으로 4.6% 증가했다. 공약가계부와 비교해보면 1조7000억원을 줄이려던 2014년에는 6000억원 감축에 그쳤고 2조7000억원을 줄여야 했던 올해는 되려 1조1000억원을 더 보냈다.

SOC 예산 증액은 건설사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3년 91조원으로 급락했던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100조원대를 회복, 107조46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101조5061억원) 실적을 웃돌고 2006년(107조3184억원)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공공부문 수주액도 40조73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재정투자 부진을 매을 대안으로 뽑은 민간투자시장은 고사 직전이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세종 제2경부고속도로는 사업방식을 정하지 못한 채 6년째 표류하는 등 신규 물량이 자취를 감췄고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G) 방식의 민간 고속도로는 줄줄이 사업 재구조화 수순을 밟고 있다. SOC 예산 감축 방침이 유효한 것도 건설업계로서는 부담이다.

부동산 시장은 온기가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매매가 늘고 가격도 회복세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은 대부분 매매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에만 2·26, 7·24, 9·1, 10·30 대책 등 4번의 대책을 내놨는데, 대부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방점을 뒀다.

2012년 73만5000건으로 급락하며 '하우스 푸어' 논란을 불러왔던 주택매매 거래량은 박근혜 정부 2년간 185만7000건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간 176만4000건보다 9만3000건 늘었다.

전국 주택가격도 2012년 -0.03%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0.31%와 1.71%로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격한 가격 상승없이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주택시장 정상화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3년차인 올해는 1·13 대책에서 뉴스테이(New Stay)로 이름 붙인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부 건설사를 빼면 여전히 사업성을 저울질하며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뉴스테이 정책을 뒷받침해 줄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 2015.02.23(월) 건설경제 】

주간 입찰동향

조달청, 24건·1213억 시설공사 입찰 집행

LH, 건설공사 3건·2421억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2.23~27)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등 모두 24건, 1213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건수는 9건이 늘었으나, 최저가 낙찰제 등 대형공사 물량이 1건으로 감소하면서 추정가격 기준 총 집행금액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물량은 역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다. 국토교통부 악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이 공사는 오는 26일 개찰예정으로, 추정가격은 334억원 규모다.

24일 개찰이 예정된 양양 남해수목장 및 광진리마을 연안정비공사(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도 추정가격 207억원 규모로 이목을 끌 전망이다.

이 밖에 서울약림시장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신축공사(건축, 한옥, 토목)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청사 신축공사(건축) 등이 100억원 이상 물량이다.

조달청은 2건을 제외한 22건의 공사가 지역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으로, 전체의 약 43%인 521억원 상당을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강원과 전남이 각각 342억원과 3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34억원, 서울 110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는 총 2421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3건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주(254억원·2건)에 비해 입찰건수는 1건, 금액은 2167억원 증가한 것으로, 300억원 이상 중대형 입찰 3건을 집행함에 따라 입찰금액이 크게 늘었다.

이번주 최대어는 올 들어 LH가 처음으로 가격개찰을 집행하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인 부천옥길 S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로, 추정가격이 1617억원에 달한다.

또 화성봉담2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487억원)와 남양주벌내 A-22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318억원)는 종합공사 낙찰제 시범사업으로 눈길을 끈다.

봉승권·채희진기자chc@